

# 중소기업 대출 은행권 '꺾기' 여전

### 김해영 민주당 의원, 최근 3년간 의심거래 총 60만건... “은행이 압박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권의 '꺾기' 관행이 여전히 현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16개 주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거래는 총 60만건, 28조7000억원이었다.

'꺾기'는 금융기관이 대출을 실행하면서 자사의 예금, 적금, 보험 등의 금융상품을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불법 영업행위를 말한다.

은행법 제22조는 은행의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일 전후 1개월 내 은행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30일이 지난 이후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위법이 아닌 만큼 이 기간을 피해 31일부터 60일 사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사례를 '구속성 금융상품 의심거래', 일명 '편법 꺾기'로 의심할 수 있다.

2014년 3분기 4만5872건이었던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꺾기 의심사례는 지난해 2분기 6만6954건으로 최고치를 찍었다가 올해 2분기 4만8495건으로

다소 줄어들었다. 금액은 매 분기 2조 원 안팎으로 집계됐다.

김해영 의원은 "경기 부진과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기폭이나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압박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이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스

### 지난해 10대 카드 대출 16억 3500만원 집계

지난해 10대의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총 16억3500만원으로 집계돼 3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공개한 '카드론 10대 이용 현황' 자료를 보면 10대들의 카드사 대출(현금서비스, 리빙빙, 카드론) 잔액은 2013년 7억5800만원에서 2016년 16억3500만원으로 3년 만에 두 배를 넘어섰다.

종류별로 보면 현금서비스의 경우 7억9500만원(회원수 1806명, 1인당 평균 44만원), 카드론 5억6900만원(회원

수 213명, 1인당 평균 267만원), 리빙빙 2억7100만원(회원수 417명, 1인당 평균 52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카드론은 잔액 기준으로 2013년 6900만원에서 3년 만에 5억6900만원으로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 의원은 "카드대출 연체가 발생하면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빛의 굴레에 얽매어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빛나는 20대'가 아닌 '빛나는 20대'가 될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



## 하림 푸드트럭 마케팅 '주목'

### 전국 방방곡곡 소비자 찾아가 무료 시식 기회 제공

하루가 멀다 하고 신제품이 쏟아지는 식품업계에서 소비자에게 한발 더 다가갈 제품을 알리는 '체험형 마케팅'이 주목 받고 있다.

체험형 마케팅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기존에는 주로 쿠키클래스나 쿠키쇼 등 '식(食)'을 앞세운 형태였던 반면, 최근에는 특색 있는 공간을 마련해 브랜드의 정체성과 스토리를 더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하림은 푸드트럭 등을 통해 소비자의 경험을 극대화함으로써 브랜드에 대한 관심과 충성도를 높여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주)하림은 지난 5월부터 전국 방방곡곡으로 소비자를 찾아가 제품 체험 및 무료 시식 기회를 제공하는 '하림 푸드트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물순환 시민문화제' '과주 북소리' 등 전국 각지의 축제나 나눔 행사에 출동하는 하림 푸드트럭은 하림의 인기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조리해 무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뜻밖의 장소에서

별미를 즐기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준다.

실제로 지난 5월부터 매일 진행되는 하림 푸드트럭 캠페인은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하림 자연실록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naturalharim) 등 온라인 상에서도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집이나 야외에서 간편하게 조리 가능한 하림 '춘천식 순살 닭갈비'와 '안동식 순살 찜닭'은 사식 후 남녀노소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하림 신선마케팅팀 정충선 차장은 "소비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색다른 방법을 고민하던 중, 짧은 층에게 인기인 푸드트럭을 활용한 무료시식회 캠페인을 생각해냈다"며 "실제로 진행해 본 결과 소비자에게 브랜드와 제품을 직접 선보이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하림은 11월에는 '제2회 군산 아트페어' 현장을 찾아 지역주민 및 행사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식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산=장영원 기자

### 특수형태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률 66.1% 소폭 감소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노후과산' 위기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가입비율은 66.1%로 작년 66.6%보다 소폭 감소했다.

가입률은 2013년 59.9%, 2014년 60.7%, 2015년 60.1% 등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과 같이 사실상 회사에 소속돼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지만, 노동관계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 시 지역가입자로 분류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 받지만 이 같은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직종별 격차는 크다.

콘크리트믹서 트럭운전자(94.7%), 택배기사(80.1%) 직종의 가입비율은 높았다. 반면 골프장캐디(24.7%), 킷

서비스기사(35.1%), 학습지교사(53.9%) 등은 낮았다.

반환일시금 지급자도 ▲2015년 17만 937명 ▲2016년 20만7751명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반환일시금 지급이란 향후 국민연금을 받으면 최소 120개월(10년) 이상 가입해 보험료를 내어하는데, 이같은 최소가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돈을 돌려 받는 것이다.

반환일시금을 받는 대신 계속가입을 신청해 가입기간 10년 이상을 채울 수 있지만, 노후준비보다는 일시금을 수령해 빠듯한 살림살이에 보태 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월소득 150만 원 미만 수령자가 전체의 63.2%를 차지했다.

기 의원은 "잠재적인 노후과산 위험을 국민연금 태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지원책들이 마련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막기 위해 이들의 가입 유인을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스

### 한국지엠, 군산대에 산학협력 장학금 전달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19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홍보관에서 2017년 희망하기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군산대학교 정종선(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 3) 등 10명에게 소정의 산학협력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희망더하기 장학금 전달식은 지역사회 내 경기 악화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휴학을 고려하고 있는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우수한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지엠한마음 재단이 후원하고 전북사회공헌협의회가 주관하였다.

전달식에는 군산대 김동익 산학협력단장, 한국지엠 군산공장생산총괄 이상권 상무, 정운모 전북사회공헌협의회 회장, 홍순경 한국지엠대외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전남편 사망했다고 연금 못받나

### 이혼시 분할연금 지급조건 까다로워... 제도개선 필요

#1. A씨는 이혼 후 남편의 가입기간 33년(391개월) 중 혼인기간인 27년(322개월)에 대해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매월 63만9000원이 A씨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남편이 사망한 후 분할연금 지급도 끊겼다.

#2. B씨의 경우 분할연금 신청조차 얻지 못했다. 그는 남편과 10년간 결혼 생활 후 관계를 정리했는데, 남편이 55세 때 사망, 지급지급을 획득하지 못했다.

노년 황혼이혼 등 이혼하는 사람이 늘면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숫자도 매년 증가하며 2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급조건이 까다로워 혜택이 극히 제한적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2만2977명이 이혼으로 인한 분할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가사·육아 등으로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이혼하더라도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잘 활용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다.

아시아 1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4개국 중 9위 수준인 높은 이혼율을 보인다. 지난해 10만7328쌍이 이혼을 택했다.2013년 분할연금 지급자는 9835명에 불과했으나 최근 3년간 2배로 증가했다.

문제는 분할연금 지급조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이다.

분할연금은 혼인 기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받는 데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배우자와의 이혼 ▲배우자연금지급의 노령연금 지급 권 취득 ▲본인이 60세에 도달할 경우 등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배우자가 사망을 하거나 장애를 입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분할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권미혁 의원은 "분할연금도 배우자의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인정해 줘야 한다"며 "전배우자가 노령연금을 수급해야 분할연금 수급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할 후 관계를 정리했는데, 남편이 55세 때 사망, 지급지급을 획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승희 의원은 그동안 분할연금 제도에 대해 '연금액' 분할에만 논의가 치우쳐 있었다며, '연금권 분할'·특히 '가입기간 분할 적용'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경우 기초연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분할연금을 대해 배우자의 연금권을 분할해 당사자 명의의 연금권을 획득하는방법 등을 제도화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연금가입 경력이 없는 40대 중반의 이혼한 당사자는 전 배우자와 '연금액 분할'과 '연금권 분할' 중 선택할 수 있다.

우리처럼 연금액을 나눠 가질 수도 있고, 연금권을 분할할 경우 이혼 후 본인 스스로 연금납입을 이어가면서 가입기간을 늘리면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증년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해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이혼 전 배우자의 연금 가입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기초소득을 보장하는데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연금가입기간을 분할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분할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키기 위한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7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